

보 도 자 료

배포 날짜	2026. 9. 3. (목)	총 2페이지
구 분	보도요청	
수 신	각 언론사 여성·아동 담당	
발 신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담 당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십대여성인권센터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팀장 한다숨 www.teen-up.com / 02) 6348-1318 서울시 은평구 통일로 680 대일빌딩 7층	

성 명 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의 국가책임을 외면하지 마라!

기획재정부는 ‘실적 줄 세우기식 쪼개기 증원’을 철회하고,
전국 17개 센터 최소 5인 인력을 보장하라!

성평등가족부와 기획재정부는 2027년도 예산안에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이하 아청센터) 인력 6명 증원(1억 100만 원)을 반영하며 ‘인프라 강화’라 자화자찬했다. 그러나 그 실상은 전국 17개 센터 중 전년도 실적 상위 6개소에 겨우 1명씩을 얹어주겠다는 기만적인 ‘갈라치기 행정’에 불과하다.

우리는 묻는다. 피해아동·청소년을 살리기 위한 지원 인력이 언제부터 ‘실적 우수 기관’에 주는 포상이 되었는가?

전국 센터의 피해 지원 건수는 2021년 12,520건에서 2025년 39,632건으로 3배 이상 폭증했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단 3명의 실무자가 발견, 24시간 긴급구조, 상담, 의료·법률·심리·자립지원, 수사·재판 동행까지 도맡으며 극심한 소진과 싸우고 있다.

성착취 피해 지원은 숫자로 줄 세울 수 있는 일이 아니다. 한 피해자가 일상을 회복하기까지 2년 이상의 장기·복합 지원이 투입된다. 기재부의 정량적 실적주의는 인력이 부족해 아웃리치에 한계가 있던 취약 지역을 증원에서 배제해 지역 격차를 더욱 악화시킬 뿐이다. 무엇

보다 전국의 센터는 서로 경쟁하는 기관이 아니라, 하나의 유기적인 국가 피해지원체계다.

현장의 사명감과 헌신은 국가가 예산을 아끼기 위해 무한정 착취할 수 있는 값싼 자원이 아니다. 일 년짜리 쪼개기 증원으로는 전문성과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다.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에 대한 최종적인 책임은 국가에 있다. 기획재정부가 해야 할 일은 센터를 실적으로 줄 세우는 것이 아니라, 전국 어디서나 피해 아동이 차별 없이 전문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기획재정부는 실적에 따른 선별적 쪼개기 증원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전국 17개 센터가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소 5인 인력 보장 예산’을 2027년도 정부 예산안에 전면 반영하라.

하나, 정부는 3년 한시 위탁사업 구조를 폐기하고, 전문성이 축적될 수 있는 안정적 피해지원체제로 전환하라.

피해자 지원을 실적으로 줄 세우지 마라.

전국 17개 센터 최소 5인 인력을 국가 책임으로 보장하라.

2026. 9. 3.

‘성착취(성매매)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국 네트워크’



참가단체 총 16개소

서울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 통합지원센터, 부산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대구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인천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광주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대전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울산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강원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충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충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전남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경북 성착취 피해아동·청소년 지원센터, 경남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제주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 특성화 성착취피해아동·청소년지원센터